

‘사법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어떻게 되나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이해진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조국 임명’ 결과 따라 특검·국조 놓고 여야 충돌 불가피 법사위 심사 기한 내달 26일...정국경색 속 국회 파행 우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사법개혁 법안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밑그림을 그린 설계자인 데다, 청와대와 여당이 ‘개혁의 아이콘’으로 내세우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회에 제출한 조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법무행정의 혁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검찰 개혁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다.

일단 현재로서는 해당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큰데다 조 후보자 임명 정국 속에서 극한 대치가 예상되는 만큼 당장의 처리 전망은 안갯속이다. 여기에 사법개혁 대상인 검찰이 조 후보자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사법개혁을 놓고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비화된 점도 변수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권은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대안정치연대, 정의당 등과 공조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가속화하고,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조사

와 특검 등을 추진할 경우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는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또 ‘조국 정국 2라운드’가 본격화되면서 사법개혁 처리를 놓고 여야 간 합의점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 후보자가 장관 지명 이후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8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들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 180일을 머물러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사법개혁이 지난 달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만큼, 사법개혁 법안을 넘겨받은 법사위에는 앞으로 49일간의 시간이 주어졌다. ‘180일’을 채우는 날이 내달 26일이다. 다만 제1야당

인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상황 이어서 법안 심사는 순조롭지 않은 전망이다. 또한 법사위의 법안심사 시한 도래 이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할지를 놓고는 여야 간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법안 자체가 법사위 소관이므로 별도의 체계·자구 심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사법개혁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이어받은 만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논리에 따르면 당장 180일간 상임위 심사가 끝나는 10월 26일을 넘겨 사법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게 된다. 반면, 한국당 입장에 따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을 더해 이르면 내달 1월 말에야 본회의의 부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

“하위 20% 경선 불이익”...민주, 현역 최종평가 준비

11월 다면평가·12월 여론조사...시행세척 공문 발송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의원들에 대한 최종 평가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의정·지역활동 등에 미진한 하위 20%를 걸러내 총선 경선에서 불이익을 주는 평가인만큼 의원들 사이에 선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민주당에 따르면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일 소속 의원들에게 ‘20대 국회의원 최종 평가 시행에 관한 안

내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시행세칙을 공고했다. 이는 의원들에게 평가 방식과 일정 등을 숙지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달 중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개정된 평가 항목 등에 대해 안내도 할 예정이다.

이 같은 준비를 거친 뒤 평가는 오는 11월 초 시작된다. 평가위는 우선 11월 5~14일 의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예

정이다. 다면평가는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 대한 평가 설문지를 작성한 이후 밀봉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작위로 선정된 복수의 동료 의원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후 12월 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한 뒤 평가내용을 취합, 같은 달 23일까지는 최종평가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중앙위원회를 열고 총선 공천물을 확정했다. 현역의원들 중 평가 하위 20%에 대한선 총점의

20%를 감산하기로 했다. 평가는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로 이뤄진다. 중간평가는 마무리된 상태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의원들 사이에서는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하위 20%에 대한 감산 폭이 큰 데다, 지역 평판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튀는 발언’을 자제하고 살얼음판을 걷듯 몸을 낮추는 경향도 감지된다. 당 지도부의 입장에 반기를 들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재선의원들은 “태도나 활동이 ‘재선’ 목표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들 음주운전’ 장제원 사퇴하라”

정의 “은폐·무마 철저 수사”...평화당 “청문회 발언 책임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8일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19)의 음주운전 사고를 놓고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음주운전은 살인을 부를 수 있는 범죄”라며 “장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식으로 비난 상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부대변인은 “장 의원은 본인이 누린 권력 안에서 타인을 비난한 그대로, 스스로 책임지고 물러나 아들 교육에 더욱 힘쓰라”며 “국회의원직을 떠나 부자간에 진솔히 소통하며 남을 위해 희생하는 봉사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부족해 사건을 덮기 위한 피해자 회유 및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죄질이 극히 나쁜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장 의원이 직접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 사건을 은폐·무마하려 한 것은 아닌지 경찰은 철저히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이 경찰조사에 의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이승한 대변인은 “음주운전은 범죄이고 살인이다”라며 “성인이 된 아들의 무책임한 사고와 불합리한 처신을 아버지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지만 지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집요하게 얘기했던 장 의원의 후보자 사퇴 얘기가 오버랩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아내가 검찰에 기소된 것을 두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한 것을 거론하며 “장 의원의 아들이 기소되면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평화당·대안정치 각자도생 ‘안간힘’

대안정치, 창당 속도 주춤...평화당 외부 연대 모색

민주평화당이 분당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가운데 탈당과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와 평화당은 ‘각자도생’을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안정치는 신당 창당 작업 속도를 좀처럼 내지 못하고, 평화당은 줄어든 당세로 어려움을 겪으며 양측은 녹록지 않은 제 갈 길을 가고 있다.

일단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외치며 야심차게 탈당을 나선 대안정치는 인재 영입 난항으로 창당 시간표가 늦춰졌다. 대안정치는 당 간판이 될 ‘제2의 안철수’를 영입해 창당한다는 방침이었는데, 인재영입 성과가 좀처럼 나지 않아 일단 ‘유성엽 체제’로 개문발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안정치는 지난 7월 출범 계획 첫 발표 때만 해도 창당 희망 시점을 9월로 제시했지만, 현재의 창당 목표 시점은 11월, 늦으면 12월이다. 이들은 당초 명절 법상에 신당을 화제거리로 올리겠다고 추측 연휴 이전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었지만, 이 역시 추석 이후로 밀렸다.

다만 당명 후보로 ‘민생속으로’, ‘중도 개혁신당’, ‘국민회의’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당명 공모에 나서는 등 창당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안정치 관계

자는 “인재를 영입한 뒤 창당하려 보니 창당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며 “일단 당 모양을 먼저 갖추기로 전략을 수정했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대안정치 의원들의 집단 탈당에 따라 원내 5당으로 쪼그라든 만큼 외부세력과의 연대를 통해 재기를 시도 중이다. 평화당은 줄어든 당세를 키우기 위한 방안으로 소상공인·청년·여성 관련 단체와의 연대, 당 공동운영, 재창당 등을 모색 중이다. 평화당이 최근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1명에서 4명으로 확대하는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도 외부세력과의 연대 구상에 따른 것이다.

정동영 대표는 첫 수순으로 지난 5일 가진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을 추진 중인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 선언을 했다. 합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당직자를 28명에서 15명으로 절반가량 줄였고, 실·국을 통합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슬림’한 당 운영으로 재창당을 도모할 방침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과의 정치적 연대에만 성공해도 당세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명망가 영입에도 힘을 쏟아 재창당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 / 공유 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